

제주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

일 시 : 2011년 5월 13일(금) 10:30 ~ 13:30

장 소 : 제주칼호텔(2층 그랜드볼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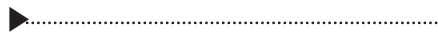
제주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

일시 : 2011년 5월 13일(금) 10:30 ~ 1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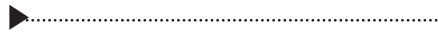
장소 : 제주칼호텔(2층 그랜드볼룸)

- 이 책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은 당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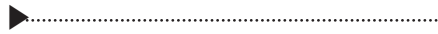
토론회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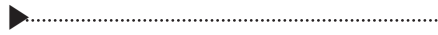
10:30 ~ 10:45 국민의례 및 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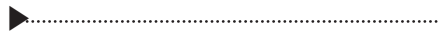
10:45 ~ 11:30 주제발표
발제자 - 최 낙 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11:30 ~ 12:20 토론
사 회 - 부 상 준 중재부장



12:20 ~ 12:30 폐회 인사말
권 성 위원장



12:30 ~ 13:30 오찬 및 간담

주제논문

제주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

최 낙 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목 차

제주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	9
1. 서 론	11
2. 연구문제	12
3. 연구방법	13
1) 분석대상	13
2) 측정항목	13
3) 코딩절차	16
4) 그래프로 본 측정항목별 개요	16
4. 연구결과	22
1) 연도별 기사건수 변화 및 청구 매체유형 특성	22
2) 매체유형별 뉴스구조 특성	25
3) 청구항목과 피해유형의 특성	34
5. 결론과 논의	39

제주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

최 낙 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1. 서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존립목적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데 있다. 물론 그 방법은 조정 및 중재 업무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있어 부정적인 의견(김창룡, 2004; 장호순, 2003; 김종서, 1994)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면이 다분히 많았다. 언론중재위가 언론피해자의 권익에 기여하고, 예방효과 측면에서 언론보도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잘못된 언론보도는 언론중재위의 존립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탐색은 언론중재위의 존립목적을 강화하고, 필요악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그간 언론중재위에서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이 되었던 기사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언론보도의 피해를 가져온 뉴스사례의 뉴스생산 과정과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한 연구들(남재일, 2008; 장호순, 2008; 양재규, 2007; 이연수, 2004; 김창룡, 2004; 장호순, 2003; 김진원, 2001; 서정우, 2000; 양삼승, 2000)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조정 및 중재 대상 기사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들(정결진, 2008; 최낙진, 2008)들도 이루어졌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제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주지역에서 조정 및 중재 신청 대상이 되었던 뉴스기사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독자적인 자기 점검의 의미에서 제주지역 뉴스보도의 특징과 그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주지역 언론은 지역 나름의 특수성과 관행이 매우 강한 곳인 만큼, 그 해결

책도 제주 안에서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주지역에서의 실험적, 시험적 연구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전체 기사를 가늠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의 보편적 기여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제주도에서 조정 및 중재 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뉴스기사 연구가 전국에서 이루어진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기사의 특징과 그 문제점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연구는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기사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거나, 중재위의 결정에 대한 판단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음을 밝혀 둔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이 되었던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 기사의 시시비비나 중재의 결정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 가능한 부분으로 극히 제한하였다.

2. 연구문제

언론조정신청대상이 된 보도기사들의 뉴스구조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조정신청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1-1. 중심주제 유형은 어떠한가?

1-2. 보도행태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보도행태의 차이는 ‘리드(lead) 기사의 가치적 술어 사용여부’, ‘보도태도의 차이’, ‘의견 제시 유형의 차이’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졌다.

1-3. 정보인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보인용은 정보원 출처 활용 수, 실·익명 처리, 정보인용 출처 명확 여부, 제목인용과

본문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 2】청구항목별로 기사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2-1. 매체유형별로 청구항목과 피해유형은 어떠한가?

2-2. 연도별 청구항목은 어떠한가?

2-3. 청구항목별 피해유형, 신청인유형, 의견제시유형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접수된 제주지역 모든 매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재위에 접수된 제주지역 매체의 조정신청건수는 175건이었으나, 실제 기사 수는 129건이었다. 이는 하나의 기사에 병합청구가 이루어졌거나, 동일 매체의 동일 기사가 다른 신청인에 의하여 청구된 경우를 하나의 기사로 집계한 결과이다.

분석대상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본부의 협조를 받아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중재부 조정신청사건기록에 첨부된 해당 기사를 근거로 하였으며, 이 가운데 1989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사는 일부가 '중략 및 후략' 되어 있어 해당 매체 전문(全文)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2) 측정항목

연구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측정항목은 ①매체유형 ②기사유형 ③신청인 유형 ④기사의 중심주제 ⑤정보인용 유형 ⑥기사의 보도행태 ⑦청구항목 및 피해유형 등 크게 일곱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가. 매체유형

매체유형은 제주지역에서 발행되는 매체를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인쇄매체는 발행주기에 따라 일간지, 주간지, 월간잡지로 구분하였다. TV는 제주지역 지상파 3사인 KBS제주, 제주MBC, JIBS와 케이블방송인 KCTV를 포함하였다. 인터넷신문은 제주의 소리, 제주투데이 등 독립형과 인터넷 제주일보, 인터넷 한라일보 등 종속형을 함께 포함하였다. 하지만 언론사명 분류에서는 인터넷 제주일보와 인터넷 한라일보는 각각 제주일보와 한라일보에 포함시켰다. 포털사이트는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제공받아 기사를 게시하는 포털사를 말한다.

나. 기사유형

기사유형은 언론중재위 연차보고서 분류기준에 따라 스트레이트, 사실, 논단·칼럼, 인터뷰, 외부 필자기고, 비평, 탐사·심층·기획보도, 만화·만평, 사진, 통계표, 가십, 기타 항목으로 세분하였다.

다. 신청인유형

신청인 소속 유형은 언론중재위 연차보고서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 회사, 이익단체(일반 단체 포함), 국가기관, 지방정부(지방공공기관 포함), 교육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기타 등으로 재구성하였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는 직업 유형에 따라 일반인,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자영업, 단체장, 선출직의원, 회사원, 문화체육예술인, 이장, 학생, 기타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라. 기사의 중심주제

중심주제는 분석대상 기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정치, 정책(행정 포함), 경제, 환경, 교육, 여성, 복지, 의료, 범죄(사고·재난 포함), 문화, 스포츠, 연예·오락, 인물·미담·동정, 종교, 역사,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도기사의 경우에는 제목과 리드(lead)에 나타난 행위주체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핵심주제를 선택하게 된다(고영철·최낙진, 2006).

마. 정보인용유형

정보인용 유형은 '정보인용 출처'와 '정보제공자의 실명·익명 여부', '직접 인용의 유형(이준웅 외, 2007)' 등을 참조하여 '정보원(原) 활용 출처', 정보원(原)이 사람인 경우의 '실명·익명 처리 여부',

‘직접 인용의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정보원(原) 활용 출처(정결진, 2008)는 기사에서 정보원(原)으로 활용한 출처의 숫자와 그 현황을 측정하였다. 정보원 활용 출처 수는 기사에서 정보원(原) 활용 출처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음’으로, 한 곳이면 1건으로, 두 곳이면 2건으로 집계하였다. 활용 출처는 정보원이 사람인 경우는 사람, 기관명만 밝힌 경우는 기관, 보고서 등 자료에 의존한 경우는 자료, 이들 출처 중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온 기사는 그 경우의 수를 밝혀 적었다.

정보제공원(原)의 실·익명 여부는 정보제공원(原)이 사람인 경우로만 제한하여 그 실명의 공개 정도 및 표현 여부에 따라 완전실명, 지역과 성명, 성명, 암호형인용, 완전익명으로 나누어 분류했다. 완전실명은 정보제공원(原)의 실명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기사를 가리키며, 완전익명은 ‘주민들에 따르면’ 식으로 정보제공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지역과 성명은 ‘한림읍 이모씨’, 성명은 ‘이모씨’, 암호형인용은 ‘A씨’ 식으로 표현된 경우이다.

직접인용의 유형은 제목에 따옴표(“ ”) 문장이 있는가를 판단한 것으로 ‘있다’와 ‘없다’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또한 제목에 따옴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내용이 본문 내용에 있는 인용인지의 여부에 따라 ‘완전일치’와 ‘부분일치’, ‘완전불일치’로 분류하였다.

바. 기사의 보도행태

기사의 보도행태는 기사가 일정한 견해나 관점 혹은 편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리드(lead)기사 가치 부여 여부’, ‘보도태도’, ‘의견제시 유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리드기사의 가치 사용 여부는 리드기사의 서술어가 기자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있다’와 ‘없다’로 구분하였다(고영철·최낙진, 2006). ‘있다’로 분류한 기사는 “--헌선이 초래되고 있다”,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와 같이 기자의 주관과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기사들이다. ‘없다’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결과를 발표했다”와 같이 객관적 상황을 그대로 전달한 기사를 가리킨다.

보도태도는 제목과 리드기사를 중심으로 기사의 내용이 ‘긍정적·호의적’, ‘중립·양비론’, ‘비판적·부정적’ 인가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의견제시 유형은 기사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상반되는 의견이 담겨있는 기사는 ‘상반의견제시형’으로, 상반된 의견 없이 어느 한 쪽만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는 ‘일방의견제시형’으로 분류하였다.

사. 청구항목 및 피해유형

청구항목은 언론중재위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회복 방법에 따랐다. 단일청구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이며, 병합청구로는 정정+반론, 정정+손배, 추후+손배, 정정+반론+손배로 하였다.

한편, 청구항목 추이 변화에 관한 측정항목으로는 피해회복 방법에 따라 보도형청구와 손배형청구로 재분류하였다. 정정, 반론, 추후는 단일청구이든 병합청구이든 그 피해회복 방법이 보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도형청구로 명명하였다. 또한 손배는 단일과 병합에 상관없이 그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에 반드시 배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배형청구로 명명하였다.

피해유형은 언론중재위의 '잘못된 보도의 유형' 분류에 따랐다. 한 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편파보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혹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 없이 전달하는 경우는 '허위보도', 전체 사실 중 부정적인 일부분만을 부각한 경우는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사실을 그릇되게 확장하여 전달하는 경우는 '과장보도', 수사결과 발표 전 범죄 혐의자를 범인으로 보도된 경우는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 보도'이다. 또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영상) 보도',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침해 보도', '인명, 지명, 통계 수치, 단어(표현)를 잘못 기록한 보도', '필자의 허락 없이 원래의 뜻과 다르게 글을 고쳐 표현한 보도' 등 9가지로 분류하여 피해유형을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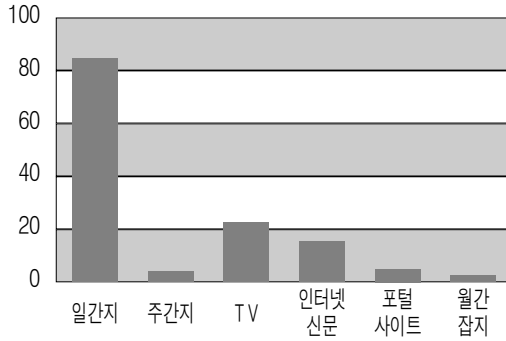
3) 코딩절차

연구자가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대학원생 1인과 함께 미리 작성된 코딩지침에 따라 129개 기사 전수를 코딩한 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코더 간 신뢰도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2.0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4) 그래프로 본 측정항목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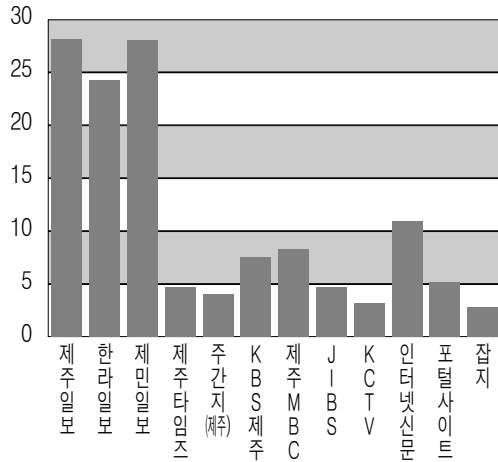
이 연구의 일반적 개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측정항목별 빈도분석을 그래프로 살펴보았다.

<그림 1> 매체유형



매체유형별로 보면 일간지 82건(63.6%), TV 23건(17.8%), 인터넷신문 14건(10.9%), 포털사이트 5건(3.9%), 주간지 3건, 월간잡지 2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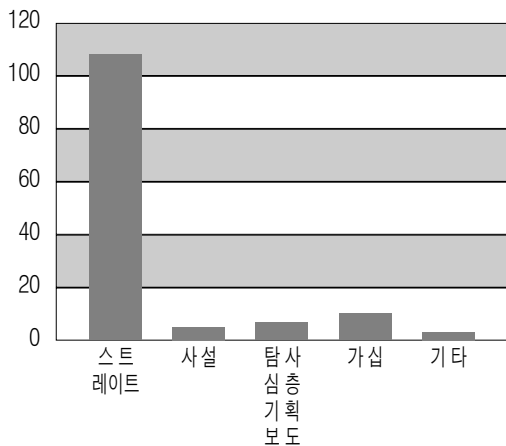
<그림 2> 언론사명



언론사 개별 매체 현황은 제주일보 28건(21.7%), 제민일보 28건(21.7%), 한라일보 24건(18.6%), 제주MBC 9건(7.0%), KBS제주 8건(6.2%), JIBS 4건(3.1%), 제주타임즈 4건(3.1%), KCTV 2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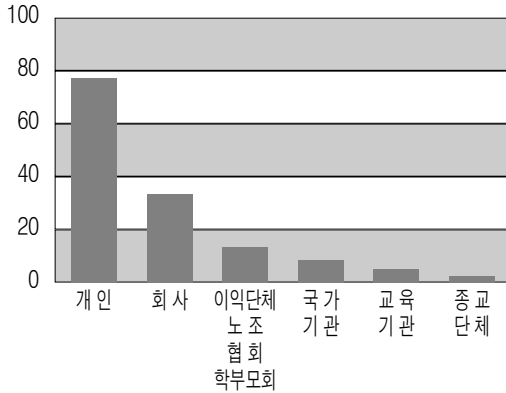
또한, 인터넷신문 전체로는 12건이지만 이 가운데 5건은 제주의 소리이다.

<그림 3> 기사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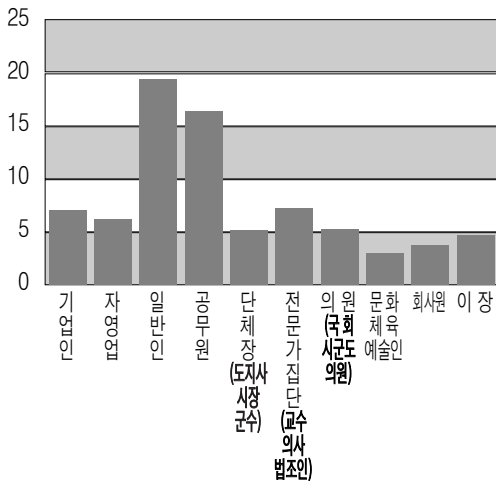
기사유형은 스트레이트 108건(83.7%), 가십 10건(7.8%), 심층기획 6건(4.7%), 사설 3건(2.3%)이며, 기타 2건은 월간잡지이다.

<그림 4> 신청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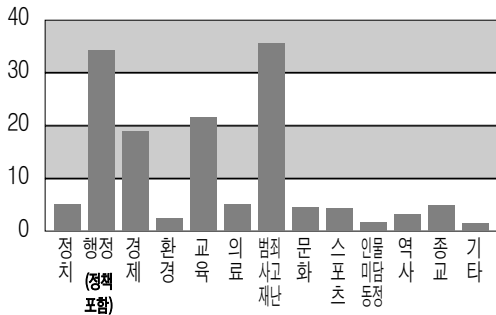
신청인은 개인 79건(61.2%), 회사 32건(24.8%), 이익단체/협회 11건(8.5%), 국가기관 4건(3.1%), 교육기관 2건, 종교단체 1건이다.

<그림 5> 개인 직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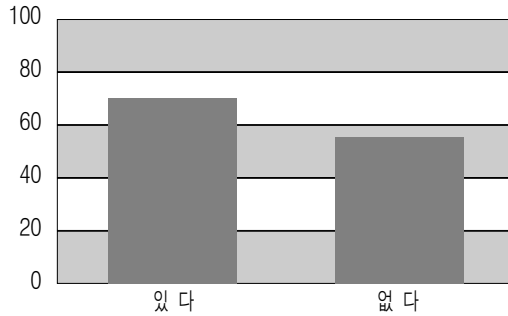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직업 유형은 일반인 20건(15.5%), 공무원 17건(13.2%), 전문가 8건(6.2%), 기업인 7건(5.4%), 자영업 6건(4.7%), 단체장 5건(3.9%), 선출직 의원 5건(3.9%), 이장 5건(3.9%), 회사원 4건(3.1%), 문화체육예술인 2건이다.

<그림 6> 중심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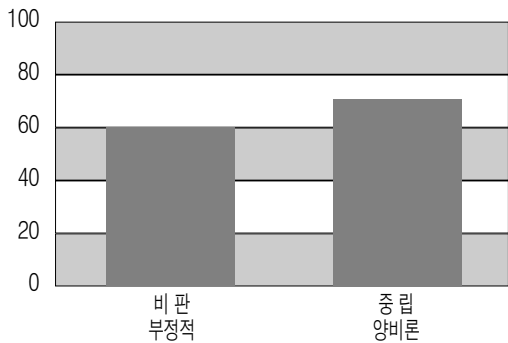
중심주제로 보면, 범죄/사고 33건(25.6%), 행정/정책 32건(24.8%), 교육 21건(16.3%), 정치 5건(3.9%), 의료 5건(3.9%), 종교 4건(3.1%), 환경 2건, 문화 2건, 스포츠 2건, 역사 2건, 미담/동정 1건이었다.

<그림 7> 기사(리드) 가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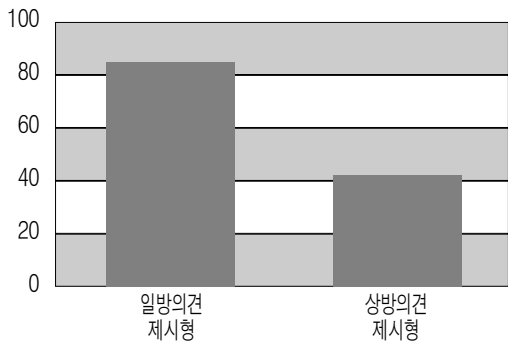
129건의 기사 가운데 71건(55.0%)에서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을 표현하는 등 리드기사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림 8> 기사(리드) 보도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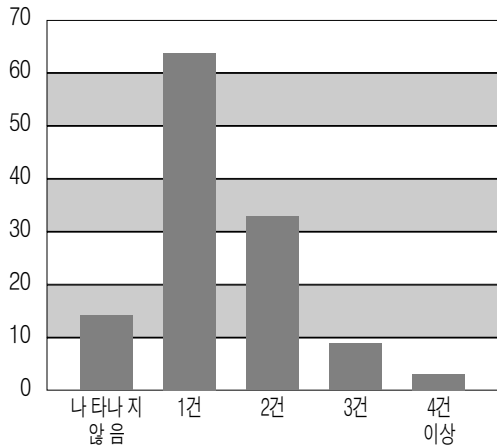
129건의 기사는 중립/양비론 69건(53.5%), 비판/부정적 60건(46.5%)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의견제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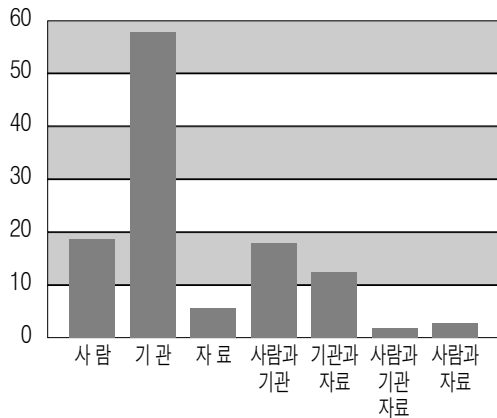
129건의 기사는 일방의견제시형 86건(66.7%), 상방의견제시형 43건(33.3%)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정보원(原) 활용 출처(사람, 기관, 자료 포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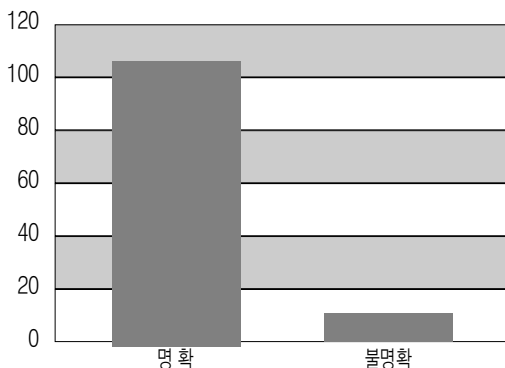
정보원(原) 활용 출처 수는 1개 64건(49.6%), 2개 35건(27.1%), 3개 12건(9.3%), 4개 이상 4건(3.1%)이었다. 정보원 활용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기사는 14건(10.9%)이었다.

<그림 11> 정보원(原) 활용 출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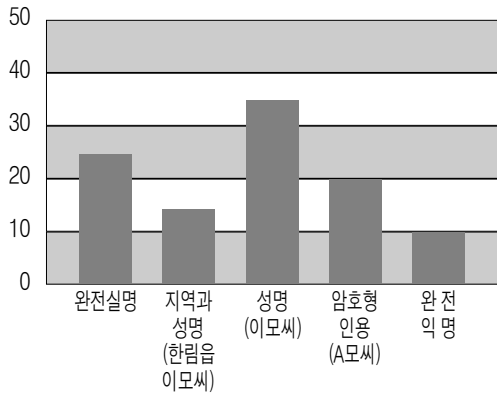
정보원(原) 활용 출처 유형은 기관만 인용한 기사가 58건(45.0%), 사람과 기관 19건(14.7%), 사람만 18건(14.0%), 기관과 자료 11건(8.5%), 자료만 5건(3.9%), 사람과 자료 3건(2.3%)이었다. 정보원 활용 출처가 나타나지 않은 14건은 결측 처리 하였다.

<그림 12> 정보인용 출처 명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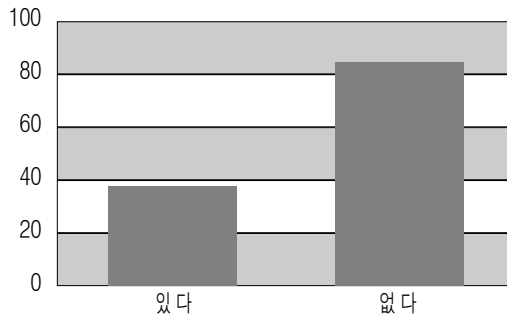
정보인용 출처가 명확한 기사는 104건(80.6%), 불명확한 기사는 11건(8.5%)이었다. 정보인용 출처 유형 가운데 사람을 정보원(原)으로 활용한 사례에서 불명확한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사람만 정보원(原)으로 활용한 기사 18건 중 6건은 정보인용 출처가 불명확하였다. 정보원 활용 출처가 나타나지 않은 14건은 결측 처리 하였다.

<그림 13> 실명·익명 처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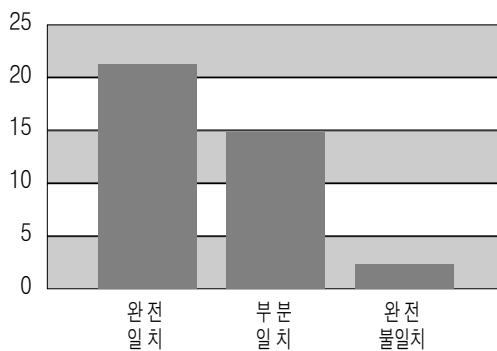
정보제공원(原)이 사람인 경우, 실명·익명 처리 유형은 성명만 35건(27.1%), 완전실명 26건(20.2%), 암호형인용 20건(15.5%), 지역과 성명만 15건(11.6%), 완전익명 10건(7.8%)이었다. 사실 등 23건의 기사는 실·익명 처리를 판단할 수 없어 결측 처리 하였다.

<그림 14> 제목 따옴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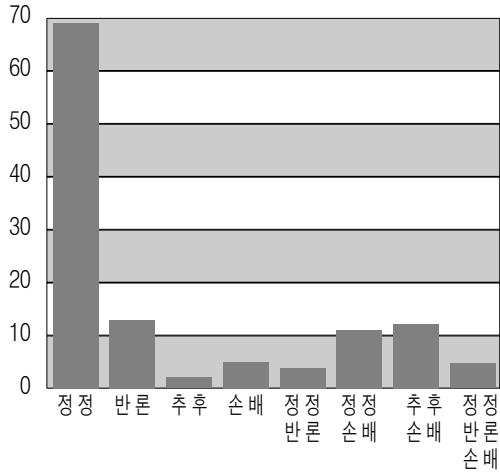
분석대상 기사 전체 129건 중 제목 따옴표 (“ ”)가 있는 기사는 39건(30.2%)이었다.

<그림 15> 제목인용 본문일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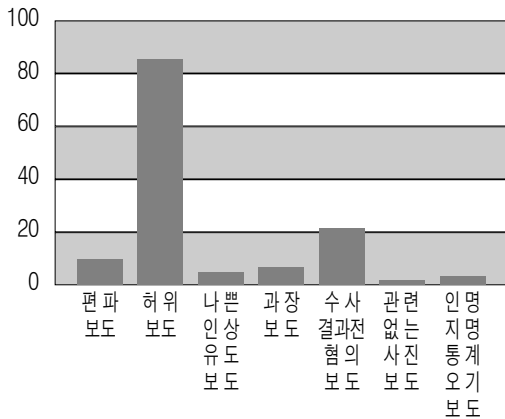
제목 따옴표가 있는 39건의 기사 가운데 제목과 본문이 완전일치한 기사는 22건(56.4%), 부분일치 15건(38.5%), 완전불일치 2건(5.1%)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청구항목



단일청구로는 정정 70건(54.3%), 반론 14건(10.9%), 손해 6건(4.7%), 추후 2건(1.6%) 순으로 나타났다. 병합청구로는 추후+손해 16건(12.4%), 정정+손해 13건(10.1%), 정정+반론+손해 5건(3.9%), 정정+반론 3건(2.3%) 순이었다.

<그림 17> 피해유형



피해유형으로는 허위보도 86건(66.7%), 수사결과 전 혐의보도 22건(17.1%), 편파보도 10건(7.8%), 과장보도 4건(3.1%), 나쁜 인상 유도보도 3건(2.3%), 인명/지명/통계 오기보도 3건(2.3%), 관련 없는 사진보도 1건이었다.

4. 연구결과

1) 연도별 기사건수 변화 및 청구 매체유형 특성

(1) 기사건수

198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언론중재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조정청구는 175건이며,

실제 기사건수는 129건이었다. 조정청구와 기사건수의 차이는 일부 기사에서 병합청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1〉 연도별 청구 기사건수

연도	중재위원회 전체 청구건수	제주중재부 청구건수	기사건수
1981	44		
1982	50		
1983	71		
1984	54		
1985	59		
1986	49		
1987	47		
1988	55		
1989	121	3	3
1990	159	2	2
1991	220	4	4
1992	381	2	2
1993	423	2	2
1994	541	6	6
1995	528	8	8
1996	556	3	3
1997	490	3	3
1998	602	6	6
1999	641	6	6
2000	607	2	2
2001	659	1	1
2002	511	7	7
2003	724	9	9
2004	759	5	5
2005	883	13	10
2006	1,087	11	12
2007	1,043	15	2
2008	954	7	2
2009	1,573	12	21
2010	2,205	48	13
전 체	16,096	175	129

전체 129건 가운데 청구건수가 2005년 10건, 2006년 12건, 2009년 21건, 2010년 13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07년과 2008년은 각각 2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당해 연도 청구건수는 2007년 15건, 2008년 7건으로 이는 2006년도 후반부 기사가 2007년도에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1989년부터 2004년까지는 각 연도별로 청구건수와 기사건수가 동일하다. 기사 한 건 당 하나의 청구만 있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하나의 기사 당 병합청구가 이루어져 청구건수가 기사건수보다 많이 나타난다. 한편 2006년과 2009년에 예외적으로 청구건수보다 기사건수가 많은 것은, 청구는 2007년과 2010년도에 이루어졌지만 기사보도는 그 이전 연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2) 매체유형

1989년에서 1993년까지는 인쇄매체인 일간지, 주간지, 잡지에서만 청구가 있었다. TV는 1994년에 처음으로 청구가 나타났다. 1996년에서 2002년까지는 일간지에서만 청구가 있었으며,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일간지와 TV 두 매체에서 청구가 있었다.

<표 2> 연도별 청구 매체유형

연도	일간지	주간지	TV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	월간잡지	전체
1989	2(66.7)					1(33.3)	3(100.0)
1990	2(100.0)						2(100.0)
1991	3(75.0)	1(25.0)					4(100.0)
1992	2(100.0)						2(100.0)
1993	2(100.0)						2(100.0)
1994	4(66.7)		1(16.7)			1(16.7)	6(100.0)
1995	7(87.5)		1(12.5)				8(100.0)
1996	3(100.0)						3(100.0)
1997	3(100.0)						3(100.0)
1998	6(100.0)						6(100.0)
1999	6(100.0)						6(100.0)
2000	2(100.0)						2(100.0)
2001	1(100.0)						1(100.0)
2002	7(100.0)						7(100.0)

2003	6(66.7)		3(33.3)				9(100.0)
2004	3(60.0)		2(40.0)				5(100.0)
2005	7(70.0)		3(30.0)				10(100.0)
2006	7(58.3)		3(25.0)	2(16.7)			12(100.0)
2007	2(100.0)						2(100.0)
2008	1(50.0)	1(50.0)					2(100.0)
2009	4(19.0)	1(4.8)	8(38.1)	8(38.1)			21(100.0)
2010	2(15.4)		2(15.4)	4(30.8)	5(38.5)		13(100.0)
전체	82(63.6)	3(2.3)	23(17.8)	14(10.9)	5(3.9)	2(1.6)	129(100.0)

2006년에는 인터넷신문에서 처음으로 청구가 나타났으며, 포털에서는 2010년에 처음으로 청구가 나타났다.

연도별 매체유형의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간 일간지 위주의 청구에서 2009년부터는 인터넷신문과 포털 등 온라인미디어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점이다.

2) 매체유형별 뉴스구조 특성

(1) 기사유형

기사유형별로 보면, 스트레이트 108건(83.7%), 가십 10건(7.8%), 심층기획 6건(4.7%), 사설 3건으로 나타났다.

〈표 3〉 매체별 기사유형

언론사명	스트레이트	사설	탐사심층기획보도	가십	기타	전체
제주일보	18(64.3)	1(3.6)	1(3.6)	7(25.0)	1(3.6)	28(100.0)
한라일보	20(83.3)		2(8.3)	2(8.3)		24(100.0)
제민일보	24(85.7)		3(10.7)	1(3.6)		28(100.0)
제주타임스	3(75.0)	1(25.0)				4(100.0)
주간지(제주)	3(100.0)					3(100.0)
KBS제주	8(100.0)					8(100.0)
제주MBC	9(100.0)					9(100.0)
JIBS	4(100.0)					4(100.0)

KCTV	2(100.0)					2(100.0)
인터넷신문	12(100.0)					12(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잡지		1(50.0)			1(50.0)	2(100.0)
전체	108(83.7)	3(2.3)	6(4.7)	10(7.8)	2(1.6)	129(100.0)

스트레이트 기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뉴스 기사유형의 특성상 스트레이트 기사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전체적으로는 일간지에서만 다양한 유형의 기사를 볼 수 있었으며, 여타 모든 매체(잡지 별도)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전부였다. 또한 이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십 10건 가운데 7건은 제주일보였다.

(2) 중심주제

일간지의 경우, 82건의 기사 가운데 행정/정책(25건, 30.5%), 범죄/사고(17건, 20.7%)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간지는 3건 모두 행정/정책(100%) 분야였다.

<표 4> 매체유형별 중심주제

중심주제	일간지	주간지	TV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	월간잡지	전체
정치	5(6.1)						5(3.9)
행정(정책 포함)	25(30.5)	3(100.0)	3(13.0)	1(7.1)			32(24.8)
경제	12(14.6)		3(13.0)	2(14.3)	2(40.0)		19(14.7)
환경	2(2.4)						2(1.6)
교육	11(13.4)		3(13.0)	7(50.0)			21(16.3)
의료	1(1.2)		2(8.7)	2(14.3)			5(3.9)
범죄·사고·재난	17(20.7)		11(47.8)	2(14.3)	3(60.0)		33(25.6)
문화	2(2.4)						2(1.6)
스포츠	2(2.4)						2(1.6)
인물·미담·동정	1(1.2)						1(0.8)
역사	1(1.2)					1(50.0)	2(1.6)
종교	3(3.7)		1(4.3)				4(3.1)
기타						1(50.0)	1(0.8)
전체	82(100.0)	3(100.0)	23(100.0)	14(100.0)	5(100.0)	2(100.0)	129(100.0)

TV는 23건 가운데 범죄·사고·재난(11건, 47.8%)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인터넷신문은 14건 중 7건이 교육(50.0%) 분야였으며, 포털은 5건 중 3건이 범죄·사고·재난(60.0%), 2건이 경제(40.0%)였다.

중심주제로 보면, 일간지에서 정치, 행정/정책, 경제, 환경, 교육, 의료, 범죄·사고·재난, 문화, 스포츠, 인물·미담·동정, 역사, 종교 등 12개 분야에서 각각 청구가 있었다. TV는 행정/정책, 경제, 교육, 의료, 범죄·사고·재난, 종교 등 6개 분야, 인터넷신문은 행정/정책, 경제, 교육, 의료, 범죄·사고·재난 등 5개 분야, 포털사이트는 경제와 범죄·사고·재난 등 2개 분야였다.

(3) 리드가치 부여 여부

일간지의 경우, 가치를 부여한 기사가 67.1%(55건)이었으며, 부여하지 않은 기사는 32.9%(27건)였다. 반면, TV는 가치부여를 한 기사가 30.4%(7건)이고, 하지 않은 기사는 69.6%(16건)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도 가치부여를 한 기사(28.6%, 4건)보다 하지 않은 기사(71.4%, 10건)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매체유형별 리드가치 부여

매체유형	있다	없다	전체
일간지	55(67.1)	27(32.9)	82(100.0)
주간지	3(100.0)		3(100.0)
TV	7(30.4)	16(69.6)	23(100.0)
인터넷신문	4(28.6)	10(71.4)	14(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월간잡지	2(100.0)		2(100.0)
전체	71(55.0)	58(45.0)	129(100.0)

일간지별로 리드가치 부여는 제주타임스(3건, 75.0%), 한라일보(17건, 70.8%), 제민일보(19건, 67.9%), 제주일보(16건, 57.1%) 순이었다. TV에서는 JIBS가 4건 중 3건(75.0%)의 기사에 리드가치를 부여하였다.

주간지 3건(100%), 월간잡지 2건(100%) 모두는 리드문장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반면 포털사이트는 5건(100%) 모두 가치부여가 없었다.

(4) 보도태도

일간지는 보도태도에서 비판/부정적 기사(45건, 54.9%)가 중립/양비론적 기사(37건, 45.1%)보다 많았다. 제주 주간지(3건)와 월간잡지(2건)의 경우, 모두 비판/부정적 기사였다.

<표 6> 매체유형별 보도태도

매체유형	비판/부정적	중립/양비론	전체
일간지	45(54.9)	37(45.1)	82(100.0)
주간지	3(100.0)		3(100.0)
TV	6(26.1)	17(73.9)	23(100.0)
인터넷신문	4(28.6)	10(71.4)	14(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월간잡지	2(100.0)		2(100.0)
전체	60(46.5)	69(53.5)	129(100.0)

이에 반해 TV는 중립/양비론적 기사(17건, 73.9%)가 비판/부정적 기사(6건, 26.1%)보다 많았다. 인터넷신문도 중립/양비론적 기사(10건, 71.4%)가 많았다. 포털의 경우는 5건 모두 중립/양비론적 기사였다.

일간지에서는 비판/부정적 기사가 제주타임스(3건, 75.0%), 한라일보(13건, 54.2%), 제민일보(15건, 53.6%), 제주일보(50.0%) 순으로 나타났다. TV에서는 JIBS만 비판/부정적 기사(3건, 75.0%)가 많이 나타났다. 중립/양비론적 기사는 KCTV(2건, 100%), KBS제주(7건, 87.5%), 제주MBC(7건, 77.8%) 순이었다.

(5) 의견제시 유형

포털사이트(5건, 100%), 주간지(3건, 100%), 월간잡지(2건, 100%) 모두 일방의견제시형이었다. TV에서도 일방의견제시형(20건, 87.0%)이 상반의견제시형(3건, 13.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일간지는 상반의견제시형(39건, 47.6%)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간지 일방의견제시

〈표 7〉 매체유형별 의견제시 유형

매체유형	일방의견제시형	상반의견제시형	전체
일간지	43(52.4)	39(47.6)	82(100.0)
주간지	3(100.0)		3(100.0)
TV	20(87.0)	3(13.0)	23(100.0)
인터넷신문	13(92.9)	1(7.1)	14(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월간잡지	2(100.0)		2(100.0)
전체	86(66.7)	43(33.3)	129(100.0)

형은 43건(52.4%)이었다.

일간지의 상반의견제시는 제민일보(17건, 60.7%), 제주타임스(2건, 50%), 한라일보(11건, 45.8%), 제주일보(9건, 32.1%) 순이었다. TV에서는 JIBS 1건(25%), 제주MBC 2건(22.2%)의 상반의견제시가 있었다. KBS제주와 KCTV에서는 상반의견제시형 기사가 없었다. 포털과 월간잡지에서도 상반의견제시는 없었다. 인터넷신문에서는 1건(8.3%)이 있었다.

(6)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

정보원(原) 출처가 나타나지 않는 기사는 14건으로 그 가운데 일간지가 13건(92.9%)이었으며, TV에서 1건이 있었다. 취재원이 나타나지 않는 일간지 13건의 기사는 제주일보 7건, 한라일보 3건, 제민일보 2건, 제주타임스 1건이었다. TV 1건은 KBS제주였다.

〈표 8〉 매체유형별 정보원 출처활용(사람, 기관, 자료 등) 수

구분	나타나지 않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전체
일간지	13(15.9)	32(39.0)	23(28.0)	12(14.6)	2(2.4)	82(100.0)
주간지		3(100.0)				3(100.0)
TV	1(4.3)	13(56.5)	8(34.8)		1(4.3)	23(100.0)
인터넷신문		10(71.4)	4(28.6)			14(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월간잡지		1(50.0)			1(50.0)	2(100.0)
전체	14(10.9)	64(49.6)	35(27.1)	12(9.3)	4(3.1)	129(100.0)

주간지(3건, 100%)와 포털(5건, 100%)의 경우, 모든 기사의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는 1개였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신문(10건, 71.4%), TV(13건, 56.5%), 월간잡지(1건, 50.0%), 일간지(32건, 39.0%) 순이었다.

2개의 정보원(原) 출처 활용은 TV(8건, 34.8%), 인터넷신문(4건, 28.6%), 일간지(23건, 28.0%) 순으로 나타났다. 여타 매체에서는 취재원 2명인 기사는 없었다.

정보원(原) 3개를 활용한 사례는 일간지(12건, 14.6%)에만 나타났다. 정보원(原)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일간지(2건), TV(1건), 잡지(1건)였고, 매체는 한라일보, JIBS, 월간잡지였다.

(7) 정보인용출처

인터넷신문(14건, 100%), 포털사이트(5건, 100%), 월간잡지(2건, 100%)는 모두 정보인용출처가 명확하였다.

<표 9> 매체유형별 정보인용출처 명확 여부

매체유형	명확	불명확	전체
일간지	61(88.4)	8(11.6)	69(100.0)
주간지	2(66.7)	1(33.3)	3(100.0)
TV	20(90.9)	2(9.1)	22(100.0)
인터넷신문	14(100.0)		14(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월간잡지	2(100.0)		2(100.0)
전체	104(90.4)	11(9.6)	115(100.0)

정보인용출처가 불명확한 경우는 일간지가 8건(11.6%), TV 2건(9.1%), 주간지 1건이었다.

(8) 실명·익명 처리

완전실명 기사 26건은 일간지 21건, TV 2건, 인터넷신문 1건, 월간잡지 2건이었다. 일간지 완전실명 기사는 한라일보 8건, 제주일보 6건, 제민일보 6건, 제주타임스 1건이었다. TV는 KBS제주

와 제주MBC가 각각 1건이었고, 인터넷신문 1건은 제주의 소리였다.

〈표 10〉 매체유형별 실명처리 여부

매체유형	완전실명	지역과성명 (한림읍 이모씨)	성명 (이모씨)	암호형인용 (A씨)	완전익명	전체
일간지	21(32.3)	10(15.4)	16(24.6)	9(13.8)	9(13.8)	65(100.0)
주간지				2(100.0)		2(100.0)
TV	2(9.5)	4(19.0)	13(61.9)	1(4.8)	1(4.8)	21(100.0)
인터넷신문	1(7.7)	1(7.7)	5(38.5)	6(46.2)		13(100.0)
포털사이트			1(33.3)	2(66.7)		3(100.0)
월간잡지	2(100.0)					2(100.0)
전체	26(24.5)	15(14.2)	35(33.0)	20(18.9)	10(9.4)	106(100.0)

일간지의 경우, 완전실명(21건, 32.3%), 성명만(16건, 24.6%), 지역과 성명만(10건, 15.4%), 암호형인용(9건, 13.8%), 완전익명(9건, 1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간지는 2건 모두 암호형인용이었다.

TV는 성명만(13건, 61.9%), 완전실명(2건, 9.5%), 지역과 성명만(4건, 19.0%), 암호형인용 1건, 완전익명 1건이었다.

인터넷신문은 암호형인용(6건, 46.2%), 성명만(5건, 38.5%), 완전실명(1건, 7.7%), 지역과 성명만(1건, 7.7%) 순이었다. 포털은 암호형인용 2건, 성명만 1건이었다.

일간지 완전익명 9건은 제주일보 3건, 한라일보 3건, 제민일보 3건으로 나타났다. TV의 경우, 완전익명 1건은 JIBS이다.

(9) 연도별 실·익명 현황

1998년까지는 완전실명 기사가 전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1990년과 1994년 각각 2건의 기사 모두 완전실명기사였다. 1995년은 8건의 기사 가운데 7건이, 1998년은 6건의 기사 중 5건이 완전실명기사였다.

〈표 11〉 연도별 실·익명처리 여부

연 도	완전실명	지역과성명 (한림읍 이모씨)	성명 (이모씨)	암호형인용 (A씨)	완전익명	전체
1989	1	1			1	3
1990	2					2
1991	1			2		3
1992		1				1
1994	2					2
1995	7				1	8
1996	1		1		1	3
1997	1		2			3
1998	5	1				6
1999	2	2	1		1	6
2000			1			1
2001			1			1
2002	2	1		2	1	6
2003			6	2	1	9
2004			2	1	1	4
2005		7	2			9
2006			6	1	2	9
2008				1		1
2009	1	1	9	7	1	19
2010	1	1	4	4		10
전체	26	15	35	20	10	106

완전실명기사는 1999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공인(公人)으로 분류 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완전실명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09년 1건은 당시 도지사 친인척 회사 관련 기사였으며, 2010년 1건은 도내 모 대학 이사장 관련 기사였다.

2003년도 이후부터는 성명만 밝히는 경우와 ‘A씨’와 같은 암호형인용이 많아졌다.

(10) 제목인용

매체별 제목 따옴표는 전체기사 129건 가운데 39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표 12〉 매체유형별 제목 따옴표 인용여부

매체유형	있다	없다	전체
일간지	33(84.6)	49(54.4)	82(63.6)
주간지	1(2.6)	2(2.2)	3(2.3)
TV		23(25.6)	23(17.8)
인터넷신문	5(12.8)	9(10.0)	14(10.9)
포털사이트		5(5.6)	5(3.9)
월간잡지		2(2.2)	2(1.6)
전체	39(100.0)	90(100.0)	129(100.0)

제목 따옴표 인용 기사 39건은 일간지 33건(84.6%), 인터넷신문 5건(12.8%), 주간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는 제민일보 16건, 한라일보 9건, 제주일보 7건, 제주타임스 1건이었다.

(11) 제목인용과 본문일치

제주일보의 제목 따옴표 기사 7건은 본문과 완전일치 5건(71.4%), 부분일치 2건(28.6%)으로 나타났다.

〈표 13〉 제목인용 본문일치 여부

신문유형	완전일치	부분일치	완전불일치	전체
제주일보	5(71.4)	2(28.6)		7(100.0)
한라일보	4(44.4)	5(55.6)		9(100.0)
제민일보	10(62.5)	5(31.3)	1(6.3)	16(100.0)
제주타임스		1(100.0)		1(100.0)
주간지(제주)		1(100.0)		1(100.0)
인터넷신문	3(60.0)	1(20.0)	1(20.0)	5(100.0)
전체	22(56.4)	15(38.5)	2(5.1)	39(100.0)

제민일보는 16건 가운데 완전일치 10건(62.5%), 부분일치 5건(31.3%), 완전불일치 1건이었다. 한라일보는 9건 중 완전일치 4건(44.4%), 부분일치 5건(55.6%)이었다. 제주타임스와 주간지는

각각 부분일치 1건씩이었다.

인터넷신문은 5건 가운데 완전일치 3건(60.0%), 부분일치 1건, 완전불일치 1건으로 나타났다.

3) 청구항목과 피해유형의 특성

(1) 매체유형별 청구 현황

일간지는 청구건수에서 정정보도 57건(69.5%), 반론 11건(13.4%), 손해 3건(3.7%), 추후 1건이었으며, 병합청구인 정정+반론 1건(1.2%), 정정+손해 3건(3.7%), 추후+손해 3건(3.7%), 정정+반론+손해 3건(3.7%)이 있었다. 주간지는 정정 1건, 정정+반론 1건, 정정+반론+손해 1건이었다.

<표 14> 매체유형별 청구항목

매체유형	정정	반론	추후	손해	정정+ 반론	정정+ 손해	추후+ 손해	정정+ 반론+손해	전체
일간지	57(69.5)	11(13.4)	1(1.2)	3(3.7)	1(1.2)	3(3.7)	3(3.7)	3(3.7)	82(100.0)
주간지	1(33.3)				1(33.3)			1(33.3)	3(100.0)
TV	5(21.7)	3(13.0)				8(34.8)	7(30.4)		23(100.0)
인터넷신문	2(14.3)		1(7.1)	1(7.1)	1(7.1)	2(14.3)	6(42.9)	1(7.1)	14(100.0)
포털사이트	3(60.0)			2(40.0)					5(100.0)
월간잡지	2(100.0)								2(100.0)
전체	70(54.3)	14(10.9)	2(1.6)	6(4.7)	3(2.3)	13(10.1)	16(12.4)	5(3.9)	129(100.0)

일간지에서는 제주일보(21건, 77.8%), 제민일보(22건, 78.6%), 제주타임스(3건, 75.0%)에서 정정보도 청구가 많았다. 한라일보(11건, 47.8%)는 다른 일간지들에 비하여 정정보도 청구가 적었으며, 상대적으로 손해가 포함된 병합청구가 많았다.

TV는 정정보도 5건(21.7%), 반론보도 3건(13.0%)이었으며, 병합청구로 정정+손해 8건(34.8%), 추후+손해 7건(30.4%)이었다. KBS제주는 여타 방송사들에 비하여 정정, 반론 대신 손해가 포함된 병합청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인터넷신문은 정정보도 2건(14.3%), 추후보도와 손배가 각각 1건이었으며, 병합청구로 정정+반론 1건(7.1%), 정정+손배 2건(14.3%), 추후+손배 6건(42.9%), 정정+반론+손배 1건이었다. 포털은 정정보도 3건(60.0%), 손배 2건(40.0%)이었다. 월간잡지는 2건 모두 정정보도 청구였다.

매체유형별로 종합해보면, 인쇄매체인 일간지, 주간지, 잡지 등은 정정보도 청구가 많았으며, 전자미디어인 TV, 인터넷신문, 포털 등은 상대적으로 손배와 병합된 청구가 많았다.

(2) 매체유형별 피해유형

일간지는 허위보도 58건(70.7%),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 8건(9.8%), 편파보도 8건(9.8%), 과장보도 4건(4.9%), 오기보도 3건(3.7%), 나쁜 인상 유도보도 1건이었다. 주간지는 3건 모두 허위보도였으며, 월간잡지는 허위보도와 나쁜 인상 유도보도가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표 15〉 매체유형별 피해유형

매체유형	편파보도	허위보도	나쁜인상 유도보도	과장보도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	관련없는 사진·영상보도	인명·지명· 통계·오기보도	전체
일간지	8(9.8)	58(70.7)	1(1.2)	4(4.9)	8(9.8)		3(3.7)	82(100.0)
주간지		3(100.0)						3(100.0)
TV	2(8.7)	12(52.2)	1(4.3)		7(30.4)	1(4.3)		23(100.0)
인터넷신문		7(50.0)			7(50.0)			14(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월간잡지		1(50.0)	1(50.0)					2(100.0)
전체	10(7.8)	86(66.7)	3(2.3)	4(3.1)	22(17.1)	1(0.8)	3(2.3)	129(100.0)

피해유형별로는 일간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V는 허위보도 12건(52.2%),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 7건(30.4%), 편파보도 2건(8.7%), 나쁜 인상 유도보도 1건, 관련 없는 사진보도 1건이었다. TV 간에도 피해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인터넷신문은 허위보도 7건(50.0%),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 7건(50.0%)이 전부였다. 포털은 5건(100%) 모두 허위보도였다.

(3) 연도별 청구항목

1996년까지는 정정보도 청구만 있었다. 89년 3건, 90년 2건, 91년 4건, 92년 2건, 93년 2건, 94년 6건, 95년 8건, 96년 3건 등 모든 기사가 정정보도 청구였다.

<표 16> 연도별 청구항목 변화

연도	정정	반론	추후	손배	정정+ 반론	정정+ 손배	추후+ 손배	정정+ 반론+손배	전체
1989	3								3
1990	2								2
1991	4								4
1992	2								2
1993	2								2
1994	6								6
1995	8								8
1996	3								3
1997	1	2							3
1998	3	2	1						6
1999	6								6
2000		2							2
2001	1								1
2002	6	1							7
2003	7	2							9
2004	2	3							5
2005	6	1			1	2			10
2006	2			3		1	3	3	12
2007	1					1			2
2008								2	2
2009			1		1	6	13		21
2010	5	1		3	1	3			13
전체	70	14	2	6	3	13	16	5	129

반론보도 청구는 1997년(2건)에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추후보도 청구는 1998년(1건)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보도형 병합청구인 정정+반론 1건과 손배형 병합청구인 정정+손배

2건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2006년 이후부터는 손배형청구가 정정과 반론 등의 보도형청구를 앞서기 시작했다. 최근으로 올수록 연도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손배형청구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청구항목별 피해유형 현황

편파보도로 분류한 기사 10건에 대한 청구는 정정보도(8건, 80.0%)와 반론보도(2건, 20.0%)가 전부였다. 오기보도 3건(100%)도 모두 정정보도 청구였다.

허위보도에 대한 86건의 청구 가운데 정정 58건, 반론 7건, 정정+반론 3건 등 일반 청구형 기사는 68건(79.1%)이었으며, 손배 3건, 정정+손배 11건, 정정+반론+손배 4건 등 손배형청구는 18건(21.0%)이다.

〈표 17〉 청구항목별 피해유형

청구항목	편파보도	허위보도	나쁜인상 유도보도	과장보도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	관련없는 사진·영상보도	인명·지명·통계·오기보도	전체
정정	8(80.0)	58(67.4)	1(33.3)				3(100.0)	70(54.3)
반론	2(20.0)	7(8.1)	1(33.3)	3(75.0)		1(100.0)		14(10.9)
추후					2(9.1)			2(1.6)
손배		3(3.5)			3(13.6)			6(4.7)
정정+반론		3(3.5)						3(2.3)
정정+손배		11(12.8)	1(33.3)	1(25.0)				13(10.1)
추후+손배					16(72.7)			16(12.4)
정정+반론+손배		4(4.7)			1(4.5)			5(3.9)
전체	10(100.0)	86(100.0)	3(100.0)	4(100.0)	22(100.0)	1(100.0)	3(100.0)	129(100.0)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는 추후 2건, 손배 3건, 추후+손배 16건, 정정+반론+손배 1건이었다. 이 유형의 경우, 추후 2건을 제외한 20건(90.8%)이 손배형청구 기사였다.

과장보도는 반론(3건, 75.0%)이 가장 많았으며, 나쁜 인상 유도보도는 정정, 반론, 정정+손배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관련 없는 사진기사 1건은 반론청구였다.

(5) 청구항목별 신청인유형

신청인이 개인인 기사 79건 가운데 정정 35건, 반론 11건, 추후 2건, 정정+반론 1건 등 보도형청구는 49건(62.0%)이며, 손배 6건, 정정+손배 6건, 추후+손배 16건, 정정+반론+손배 2건 등 손배형청구는 30건(40.0%)이었다.

〈표 18〉 청구항목별 신청인유형

청구항목	개인	회사	이익단체·노조·협회·학부모회	국가기관	교육기관	종교단체	전체
정정	35(44.3)	21(65.6)	9(81.8)	4(100.0)		1(100.0)	70(54.3)
반론	11(13.9)	3(9.4)					14(10.9)
추후	2(2.5)						2(1.6)
손배	6(7.6)						3(2.3)
정정+반론	1(1.3)	1(3.1)			1(50.0)		5(3.9)
정정+손배	6(7.6)	4(12.5)	2(18.2)		1(50.0)		13(10.1)
추후+손배	16(20.3)						16(12.4)
정정+반론+손배	2(2.5)	3(9.4)					5(3.9)
전체	79(100.0)	32(100.0)	11(100.0)	4(100.0)	2(100.0)	1(100.0)	129(100.0)

신청인 유형이 회사인 경우에는 32건 중 정정 21건, 반론 3건, 정정+반론 1건 등 보도형청구가 25건(78.1%)이었으며, 정정+손배 4건, 정정+반론+손배 3건 등 손배형청구는 7건(21.9%)이었다. 이익단체는 11건 중 정정보도 9건(81.8%)이며, 손배+정정 2건(18.2%)이었다.

국가기관은 4건(100%) 모두 정정보도 청구였고, 종교단체 1건도 정정보도 청구였다. 교육기관은 정정+반론 1건, 정정+손배 1건이었다.

(6) 청구항목별 의견제시 유형

일방의견제시형 기사 86건 가운데 정정 39건, 반론 8건, 추후 2건, 정정+반론 3건 등 보도형청구 기사는 52건(60.5%)이었으며, 손배 5건, 정정+손배 12건, 추후+손배 15건, 정정+반론+손배 2건 등 손배형청구 기사는 34건(39.5%)이었다.

〈표 19〉 청구항목별 의견제시 유형

청구항목	일방의견제시형	상반의견제시형	전체
정정	39(45.3)	31(72.1)	70(54.3)
반론	8(9.3)	6(14.0)	14(10.9)
추후	2(2.3)		2(1.6)
손배	5(5.8)	1(2.3)	6(4.7)
정정+반론	3(3.5)		3(2.3)
정정+손배	12(14.0)	1(2.3)	13(10.1)
추후+손배	15(17.4)	1(2.3)	16(12.4)
정정+반론+손배	2(2.3)	3(7.0)	5(3.9)
전체	86(100.0)	43(100.0)	129(100.0)

상반의견제시형은 기사 43건 중 정정 31건, 반론 6건, 정정+반론 1건 등 보도형청구 기사는 37건(86.1%)이었으며, 손배 1건, 정정+손배 1건, 추후+손배 1건, 정정+반론+손배 3건으로 손배형청구 기사는 6건(13.9%)이었다.

5. 결론과 논의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보도기사는 언론의 공익성을 실현하는 ‘표현의 자유’와 피해 당사자인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김경호, 2004; 최영재, 2004; 강정홍, 2002; 차재영, 2002; 윤재윤, 2001)하는 저널리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 제주중재부에서 다룬 조정신청 대상 보도기사들의 뉴스구조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정신청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은 첫째, 중심주제로 보면 사건·사고·범죄(33건, 25.6%)와 행정/정책(32건, 24.8%)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매체별로 보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일간지에서는 행정/정책이 사건·사고·범죄보다 10% 가량 높게 나타난 반면, TV에서는 사건·사고·범죄가 행정/정책보다 약 30%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50%가 교육분야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체별로 다루는 중심주제의 영역이 다름을 확연하게 보여주며, ‘잘못된 보도’ 논의를 떠나 다양성 측면

에서 보자면 매체별로 뉴스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겠다.

한편, 제주지역의 이러한 결과는 지난 3년간(2005~2007) 대구지역의 사례(정결진, 2008)에서 사건·사고·범죄(61.8%)기사가 매우 높게 나타났던 점과도 대조적이다. 참고로 2007년 중앙일간지 사례(최낙진, 2008)에서는 정책/행정(29.3%)이 사건·사고·범죄(18.3%)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리드 기사의 가치 부여 형태에서도 매체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사 전체로는 기사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미를 표현하는 가치부여(55.0%)가 약간 높게 나왔다. 기사의 가치부여는 의미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매체유형별로 보면, 인쇄매체인 일간지, 주간지, 잡지에서 가치부여 기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상·온라인 매체인 TV,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에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간지에서 가치부여 기사가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최낙진, 2008)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일간지들의 환경감시와 사회고발 기능을 우선하는 관행에서 연유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특히 개인을 상대로 한 기사에서는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하겠다.

보도태도에서도 매체유형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간지는 비판/부정적 기사가 45건(54.9%)으로 TV 6건(26.1%)보다 높았다. 주간지와 월간잡지 기사 모두는 비판/부정적 기사였다. 이처럼 오프라인형 인쇄매체들에서는 비판/부정적 기사가 많은 반면, 영상과 온라인형인 TV, 인터넷신문, 포털에서는 중립/양비론적 기사가 대세를 이루었다.

의견제시형태는 전체적으로 상반의견제시형보다는 일방의견제시형이 많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간지에서는 상반의견제시형(47.6%)이 높게 나왔다. TV의 상반의견제시형 기사는 3건(13.0%)에 불과했으며, 포털은 5건 모두, 인터넷신문은 1건을 제외한 13건의 기사가 일방의견제시형이었다.

셋째,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에 있어서도 매체별 차이는 나타났다. 정보원 출처가 나타나지 않는 기사 14건은 일간지가 13건(92.9%)으로 TV 1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일간지에서 나타나는 기사유형인 기자석, 기자수첩과 같은 가십기사나 사설처럼 기자나 논설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작용하는 기사에서 기인한 특성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에 있어 3개이상을 활용한 매체는 일간지가 14건, TV가 1건이었다. 잡지도 2건 중 1건이 있었으나 절대 수가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특히 TV는 시청각을 주로 사용하고, 시간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인쇄매체에 비하여 정보원 출처 활용 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보인용출처는 인터넷신문, 포털, 월간잡지에서 모든 기사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반면, 이들 매체들에 비하여 일간지와 TV에서는 정보인용출처가 불명확한 기사들이 10%정도 나타났다. 정보인용출처가 명확한 것은 기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동근, 2001; 이재경·김진미, 2000)인만큼 정보인용출처 불명확 기사 비율은 더욱 낮아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제주지역에서 실·익명처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의 하나이다. 지역의 특성상 약간의 정보만 제공되어도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에서는 그간의 실명, 익명의 구분을 좀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실명처리 정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완전실명의 경우는 일간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성명만 밝히는 경우는 TV에서, 암호형인용은 인터넷신문과 포털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사의 실·익명 처리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도별 변화이다. 1998년까지는 완전실명 기사가 전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완전실명기사는 1999년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공인(公人)으로 분류 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완전실명기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3년도 이후부터는 성명만 밝히는 경우와 'A씨'와 같은 암호형인용이 많아졌다.

취재원 적사에서 익명처리는 취재원보호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보와 허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함에도 제주지역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익명처리가 많아지는 것은 부정확한 보도에 대한 기자의 책임회피, 취재의 편익 남용(이상기, 2006)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을 요구한다. 물론 익명보도는 취재원 보호 및 인격권 확보의 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익명보도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환경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적절한 장치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 조정과정에서 취재원의 제한적 실명이 장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최낙진, 2008).

다섯째, 제주지역의 제목 따옴표 인용은 39건(30.2%)으로, 2007년 중앙 일간지 37.2%(최낙진, 2008) 보다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일간지로만 보면 전체 기사 82건 중 33건(40.2%)이 제목 따옴표 인용이어서 중앙 일간지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제목 따옴표 인용은 다른 매체들에 비하여 제주일간지와 인터넷신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직접인용구는 기사 본문에 있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제목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사 내용이 과대포장되거나 축소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다(박

재영, 2006). 반면 직접인용은 사람의 말을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인간적인 체취를 가미하게 되며, 직접 관찰에 못지않은 사실로서의 설득력을 갖게 된다(송용희, 2005)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본문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직접인용부호의 사용이다. 이러한 직접인용부호의 남용은 기사 내용을 왜곡하거나 포장할 가능성을 커지게 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에서 본문내용과 완전일치 하지 않은 부분일치와 완전불일치의 직접인용 따옴표 사용 기사는 43.0%였다.

다음으로 청구항목별 기사의 특성은 첫째, 매체유형별 청구항목을 보면, 오프라인형 인쇄매체인 일간지, 주간지, 잡지 등은 정정, 반론 등의 보도형청구가 많았고, TV와 인터넷신문은 손배형청구가 많았다. 매체유형별 피해유형은 일간지와 주간지에서는 허위보도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TV와 인터넷신문은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TV와 인터넷신문의 경우, 타 매체에 비해 기술적으로 속보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따라서 TV, 인터넷과 같은 속보성 매체와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의 연관성에 대한 추후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둘째, 최근으로 올수록 손배형청구가 많아지고 있다. 1996년까지는 정정보도 청구만 있었으며, 1997년 반론보도, 1998년 추후보도가 처음 등장했다. 이러한 보도형청구들은 2004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손배청구가 도입됨에 따라 정정+반론의 보도형 병합청구 외에도 정정+손배의 손배형 병합청구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06년 이후는 손배형청구가 보도형청구를 앞서기 시작했다. 최근에 와서는 손배형청구가 더욱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손배형청구가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론중재위에서도 언론피해 대상자들의 손배형청구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셋째, 청구항목별 피해유형을 보면 편파보도, 나쁜인상유도보도, 과장보도, 오기보도 등 보도형청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허위보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배형청구가 많았으며, 특히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는 대개 손배형청구로 이어졌다.

신청인유형에서 보면, 손배형청구는 개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회사였다. 이익단체에서도 손배형청구가 나타났다. 반면 국가기관과 종교단체 등은 모두가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향후 개인과 회사의 손배형청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견제시유형으로 보면, 일방의견제시형에서 상대적으로 손배형청구가 높게 나타났다, 일방의견제

시형은 상반의견제시형보다 손배형청구가 3배 가량 높게 나왔다. 상반의견제시형에서는 보도형청구가 주를 이루었다.

청구항목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지금은 보도형청구보다는 손배형청구가 대세이며, 향후에는 손배형청구가 기본이 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간 손배형은 국가기관과 단체보다는 개인과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간지보다는 TV와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손배형청구가 많았다. 기사내용으로 보면, 허위보도와 특히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에서, 기사형식에서는 일방의견제시형 기사에서 손배형청구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제주지역 언론들의 취재 방식, 기사작성, 뉴스 편집 등 저널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언론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를 전수조사하였음에도, 129건이라는 적은 사례 수에서 오는 내용분석 상의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비교 분석이나 유형 분류를 할 경우 1~2건의 사례들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신청인에서 2명의 사례가 빠져 있음도 밝혀 둔다. 같은 매체, 같은 기사임에도 신청인이 각각 달라, 이 경우는 주 신청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만을 신청인 유형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실제 신청인 수는 2명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정정, 반론, 추후 등의 보도형청구와 손배 등의 손배형청구가 실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정홍(2002). 자유언론과 명예훼손. 『언론중재』, 2002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 고영철·최낙진(2006).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신문사 선정 시행 1년 평가-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신문 정책과 지원 효과』, 한국언론재단.
- 김경호(2004).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언론과 수사기 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2권 2호, pp.88~120.
- 김민남(2007). 언론조정신청에서 보인 '피해' 주장과 취재관행의 문제-몇 가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부산토론회(2007.04.10) 주제논문집」. 언론중재위원회.
- 김종서(1994).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 제5집, 서울: 헌법재판소.
- 김진원(2001). 취재보도와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 혐의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중 재위원회 주최. 2001 정기세미나(8. 30) 주제논문. 언론중재위원회.
- 김창룡(2004). 언론피해구제제도 활성화방안. 「언론중재위원회 부산토론회(2004. 5. 21) 주제논문집」. 언론중재위원회.

- 남재일(2008). 언론 분쟁에 나타난 취재관행의 문제, 『언론중재』, 2008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 박재영(2006). 뉴스 평가지수 개발을 위한 신문 1면 머리기사 분석. 2020 미디어위원회 실 행위위원회(편). 『한국의 뉴스미디어 2006』, 한국언론재단, pp.147~220.
- 박재영 · 이완수(2007). 인공과 취재원 적시에 대한 한미 신문 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pp. 439~468.
- 박천일(2004). 따옴표 뒤에 숨은 언론. 조선일보, 2004. 2. 9, A48.
- 서정우(2000). 오보의 발생과 대책.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지방토론회(2000. 9. 26) 주제논문집」. 언론중재위원회.
- 송용희(2005). 한국 종합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조선일보와 한겨레 사회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pp. 80~104.
- 양삼승(2000). ‘언론평해구제법’ (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방안」 세미나(2000. 11. 23, 대전) 자료집. 언론중재위원회.
- 양재규(2007).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언론보도의 문제점. 『언론중재』, 2007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pp.65~84.
- 윤재운(2001). 중재사례로 본 언론보도.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2001 정기세미나(8. 30) 주제 논문. 언론중재위원회.
- 이동근(2001). 언론의 취재원 사용관행과 기사의 신뢰도. 『언론중재』, 2001년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pp.20~31.
- 이상기(2006). 신뢰도 떨어뜨리는 익명 보도의 함정. 『미디어 월드 와이드』, 47호, pp.39~41.
- 이연수(2004). 언론중재사례로 본 지역 언론. 「언론중재위원회 광주토론회(2004. 11. 5) 주제논문집」. 언론중재위원회.
- 이재경 · 김진미(2000). 한국 신문 기사의 취재원 사용 관행 연구. 『한국한국학 연구』, 2호, pp.160~179.
- 이준웅 · 양승목 · 김규찬 · 송현주(2007). 기사 제목에 포함된 직접인용부호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pp. 64~90.
- 장호순(2003).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정간법 개정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 세미나(2003. 8. 28) 자료집. 언론중재위원회.
- 장호순(2008). 위원회 조정사례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본 보도의 문제점과 피해구제. 『언론중재』, 2008년 봄호, 언론중재위원회. pp.4~17.
- 정결진(2008). 조정 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성, 『언론중재』, 2008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 차재영(2002).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2002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 최낙진(2008). 언론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지방토론회(2008. 05. 23) 주제논문집」. 언론중재위원회.
- 최영재(2004).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 신뢰도 추락 초래: 참을 수 없는 사소한 저널리즘. 『신문과 방송』, 10권, pp.58~61.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도 연간보고서』.
- 『2010년도 연간보고서』.
-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 『201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MEMO

MEMO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 02) 397 - 3114 법무상담팀 : 02) 397 - 3000, 3010, 3100 팩스 : 02) 397 - 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 051) 759 - 7083~4 / 팩스 : 051) 759 - 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53) 763 - 0020~1 / 팩스 : 053) 763 - 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 062) 676 - 0360~1 / 팩스 : 062) 676 - 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42) 525 - 0778~9 / 팩스 : 042) 525 - 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6층 전화 : 031) 211 - 9027, 9022 / 팩스 : 031) 212 - 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 033) 255 - 2878~9 / 팩스 : 033) 255 - 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전화 : 043) 286 - 8083, 8081 / 팩스 : 043) 286 - 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 063) 288 - 0010, 0981 / 팩스 : 063) 288 - 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전화 : 055) 263 - 1787, 1780 / 팩스 : 055) 263 - 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 064) 722 - 3328, 3352 / 팩스 : 064) 726 - 3201

